

“보증기관 수수료 점검하고 하청업체 ‘제값받기’ 총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소기업·소상공인 차별 점검
 인력충원 등 조직개편 준비
 9월 ‘기업눈높이심의회’ 발족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보증기관들의 요율이 적정인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차별하진 않는지 등을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점검해 나갈 것이다. 255개에 달하는 국가시험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과다 수수료나 시험처리기간 지연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올해 2월 말 위촉돼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IMF 시절 받아놓은 어음의 60%가 부도나는 등 고비를 넘기면서 3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해왔고 기업인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많은 기관들을 접하면서 느

는 바가 많아 10년전부터 나라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말로 기업인이란 공무원이 된 배경을 대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옴부즈만은 차관급으로 비상근 자리다. 하지만 박 옴부즈만은 면접 당시 본인이 상근을 하겠다고 정부를 오히려 설득했다.

자신이 옴부즈만으로 있는 대주그룹을 중

기업에서 중견기업 반열에 올려놓은 기업인 출신으로 정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봉사하겠다는 뜻에서다. 물론 비상근이나 상근이나 월급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박 옴부즈만은 취임 당시 자신을 ‘기업을 대신해 정부에 복을 올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3년간의 옴부즈만 임기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그동안 전임 세 명의 옴부즈만들이 집중했던 ‘규제혁신’ 외에도 ‘시장 공정화’를 꼽았다.

박 옴부즈만은 “대기업들은 계열회사에 물량을 몰아줘 식구들을 감싸고, 최저가찰제를 이용해 하청 중소기업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 공사 등을 낙찰받으면 ‘교통세’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고 일감을 고스란히 하청업체에 넘기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거래 투명화, 제값받기 등을 옴부즈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극심하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좀더 남기고, 또 그만큼 종업원 임금을 올려줘 결국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에서 나온 포부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좀 지났지만 벌써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다양한 시도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 새로 오픈한 ‘규제장터 1번가’가 대표적이다.

박 옴부즈만은 “그동안 규제를 발굴하거나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이 부족해 노력한 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주요 산업별 핵심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돼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규제장터 1번가는 자동차산업, 게임산업, 레저산업, 신재생산업 등 32개 기업군에 대한 421건의 규제혁신과제를 등록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렸다.

빠르면 오는 9월까지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의체로,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 가량을 위촉해 ‘핵심 규제’에 관해 옴부즈만이 갖고 있는 ‘권고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달에는 기업들의 인증, 판로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성장응답센터’도 오픈한다.

이렇게 일을 벌여놓다보니 현재의 조직 규모로는 어렵없는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과편을 받고, 민간에서 채용한 30명 정도의 옴부즈만실 인원이 연 17억원의 예산으로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옴부즈만 취임 이후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박 옴부즈만은 “새로운 업무에 맞춰 이달 중 옴부즈만실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인력 충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예산도 좀 더 필요하다. (기자들이) 많은 도움이 돼 달라(웃음)”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그룹 ‘프로덕트 101 챌린지’ 1차 통과 65개사 선정

CJ그룹이 작은 기업과 프로덕트 101 ‘프로덕트(Product) 101 챌린지’의 첫 관문을 통과한 기업을 발표했다.

CJ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창업·중소기업 발굴·육성 프로젝트 ‘프로덕트 101 챌린지’의 CJ 유통 연합 품평회를 진행하고 국내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기업 65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탑스타운에서 진행된 CJ 유통 연합 품평회에서는 ‘프로덕트 101 챌린지’ 1차 선정 기업 101개 중 유통·마케팅·무역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86개사가 참가해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였다.

CJ그룹에서는 유통 계열사 MD, 글로벌 사업 담당자, 미디어 전문가 30여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시장성, 차별성,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중진공-신한은행 청년일자리 창출 ‘협력’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한은행이 손잡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진공은 신한은행과 3일 경기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청년취업 두드림(Do-Dream) ‘스마트원정대 출정식’ 가졌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 출정식, 축하콘서트 등으로 꾸며진 출정식에는 선발된 청년 취업준비생 400명과 중소벤처기업 CEO 멘토 50명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더 나은 내일,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이상직 이사장, 위성호 은행장과 학생대표 3명이 참여한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진로, 취업,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승호 기자

중소기업 협동조합 2편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광무영 이사장과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왼쪽부터)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양오염 개선 위해 ‘맞손’ “오염탐사기술로 자율정화”

주유소조합-토양정화조합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과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이 오염된 토양을 효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뚝뚝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이업종간 융합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유소운영조합과 토양정화조합은 최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업계의 자율정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현재 주유소업계는 정부의 인허가 완화와 따른 경쟁 심화와 신규 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폐업에 직면한 주유소들이 수도룩하다.

하지만 폐업을 하려해도 운영하던 주유소의 토양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토양환경평가를 해야 해 환경 관련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땅속의 토양오염을 잘못 건드리면 정화비용이 만만치 않고, 비용 추산도 쉽지 않아 폐업도 하지 못

하고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MOU를 통해 주유소운영조합과 토양정화조합은 주유소의 토양환경평가 및 양수, 양도, 임대, 폐업 진행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주유소운영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주유소 부지 소유주나 운영인들이 실시간으로 첨단탐사장비를 사용할 경우 부지의 지중오염실태를 현장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른 토양정화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엔 검사결과를 받아보던 수동적 방식이었지만 이제 오염 확인과 정화 설계 등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돼 오염상태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나 재정부담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과징금 폭탄’ 우려에 집회 “중소 협력업체 사업 붕괴”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업계에 과징금 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다며 3일 거리로 나섰다.

회원 조합 관계자 100여 명이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승강기관리조합 전영철 이사장은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관련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중소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수준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 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엔 4800만원을 벌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조합측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와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엔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김승호 기자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 관계자들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내년 3월 시행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으로 과징금 폭탄이 우려된다며 ‘개정철회’를 주장하고 있다.